

Vol. 44

June. 2022

Gyeongbuk Happiness
Foundation News

법 인 명 칭 경북행복재단
발행·편집인 경북행복재단 이육열
주 소 39332 경상북도 구미시 박정희로 155 글로벌관 3층
T E L 054)710-8832
홈 페이지 www.ghf.or.kr

경북행복 BRIEF



CONTENTS

01. 경북 장애인 및 노인의 비대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실태 및 정책제안

김동화 | 경북행복재단 선임연구원
이동석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애선 | 영남이공대학교 사회복지·보육과 교수

02. 경상북도 중년층 노후준비 실태조사

김성훈 | 경북행복재단 선임연구원
조성숙 |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심정미 | 영남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03. 경상북도 조손가정 지원방안

김유리 | 경북행복재단 연구원
이상우 |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01 경북 장애인 및 노인의 비대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실태 및 정책제안

김동화 (경북행복재단 선임연구원)
이동석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애선 (영남이공대학교 사회복지·보육과 교수)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2020년 1월 코로나19의 갑작스런 발생을 시작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 및 지속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와 비대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져가고 있음.
- 과거 신종플루(Novel swine-origin influenza A(H1N1)),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 메르스) 사태처럼 코로나19도 곧 잠잠해질 것이라 기대했었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위드(With) 코로나'뿐만 아니라 새로운 재난(감염병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임.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면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 현장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온택트 서비스를 시작할 수 밖에 없음.
- 사회복지 분야는 기존 '대면 방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4차산업시대 '비대면 방식'의 병행운영이 요구되며, 원활한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경북 장애인 및 노인의 비대면 서비스 시행 어려움 등을 조사하여, 경북 사회복지서비스의 비대면 서비스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경북 비대면 사회복지서비스 실태조사

1) 비대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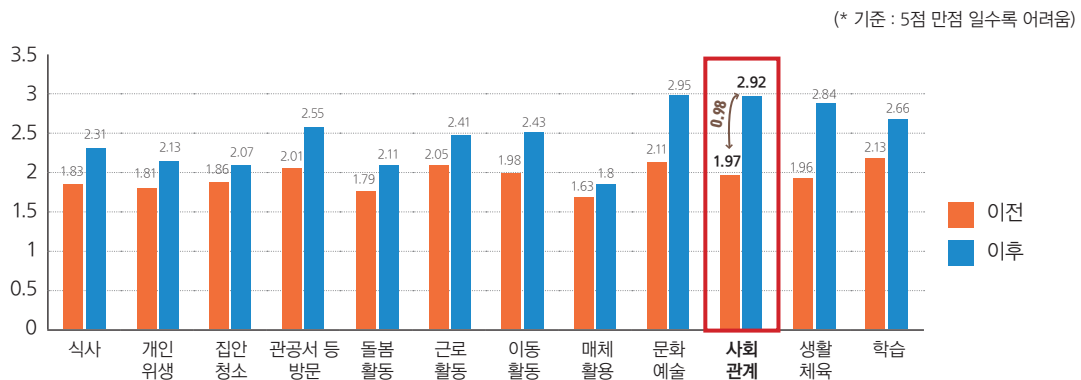
- 조사대상 :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 비대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복지관 172명, 노인복지관 118명)
- 조사기간(방법) : 2021년 10월 4일 ~ 10월 22일(전화 및 대면조사)
- 조사내용 : 코로나19에 대한 인식 및 생활변화, 비대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및 경험, 비대면 사회복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 조사결과

- 비대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57.3세 여성으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많았고, 지체 장애인이 가장 많으며 주변에 도움 주는 사람은 부모인 경우가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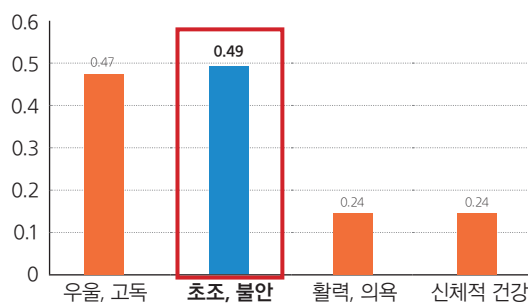
(1)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변화

- 코로나19 이후 여가활동 중 '문화예술, 사회관계'에서의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일상생활 변화가 가장 큰 부분은 '사회관계(평균 0.98점 차이)'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이후의 일상생활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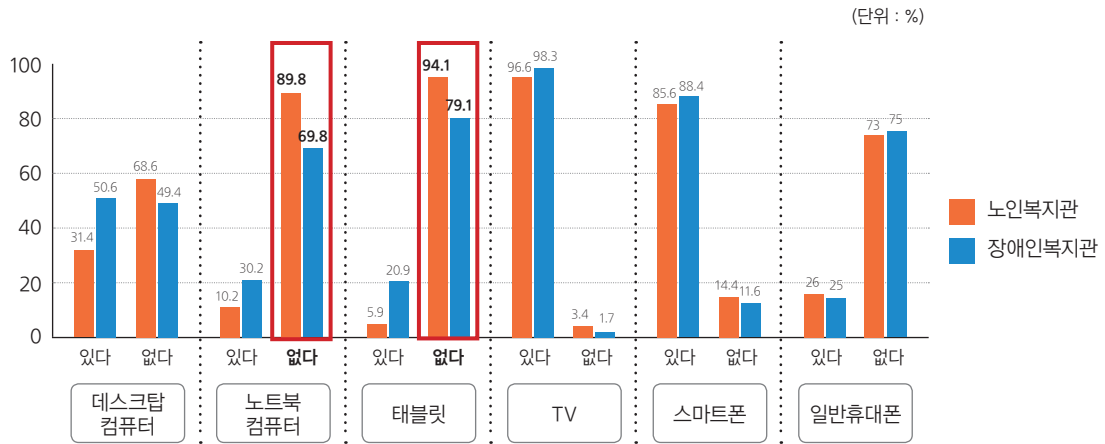
- 코로나19 이후 정서와 신체적 건강상태에서는 '초조 및 불안감', '우울 및 고독감'에서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변화가 가장 큰 부분은 '초조 및 불안감'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이후의 정서 및 신체적 건강 평균값 차이

(2) 비대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및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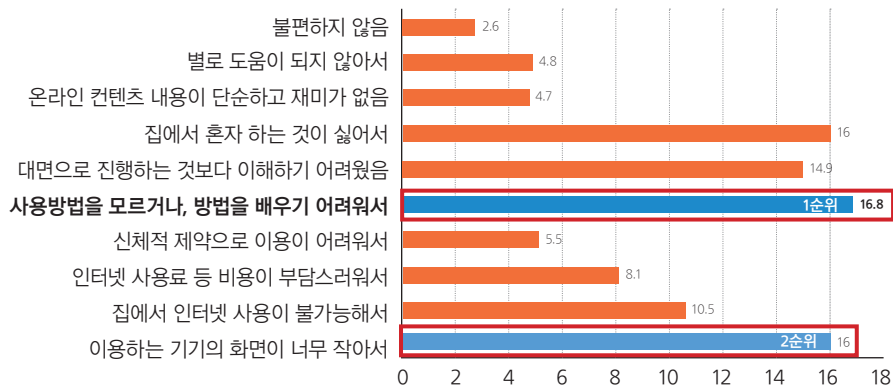
- 정보통신 기기 보유 현황으로는 87% 이상 'TV,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태블릿, 노트북·컴퓨터'는 과반수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기관 유형별 이용자의 정보통신 기기 보유 현황

- 비대면 서비스 이용의 편리성(좋은점)으로는 ‘이동하지 않고 참여 가능’, ‘대면접촉이 없어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도움’, ‘반복시청 및 복습하기 좋음’이 높게 나타남.
- 비대면 서비스 이용의 불편성(힘든점)으로는 ‘**사용방법을 모르거나, 방법을 배우기 어려워**서’, ‘**이용하는 기기의 화면이 너무 작아서**’, ‘집에서 혼자 하는 것이 싫어서’ 등으로 불편하다는 의견이 높았음.

(단위 : %, 다중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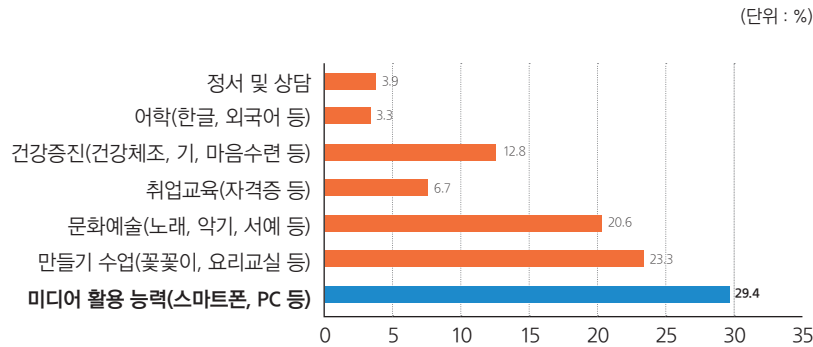
[그림 4] 비대면 서비스 이용의 불편성

- 특히 노인의 경우 ‘집에서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하다’, ‘사용방법을 모르거나 방법을 배우기 어렵다’는 불편함이 있는 반면, 장애인의 경우 ‘이용하는 기기 화면이 작다’, ‘사용방법을 모르거나 방법을 배우기 어려웠다’는 불편함이 큰 것으로 나타남.

(3) 비대면 사회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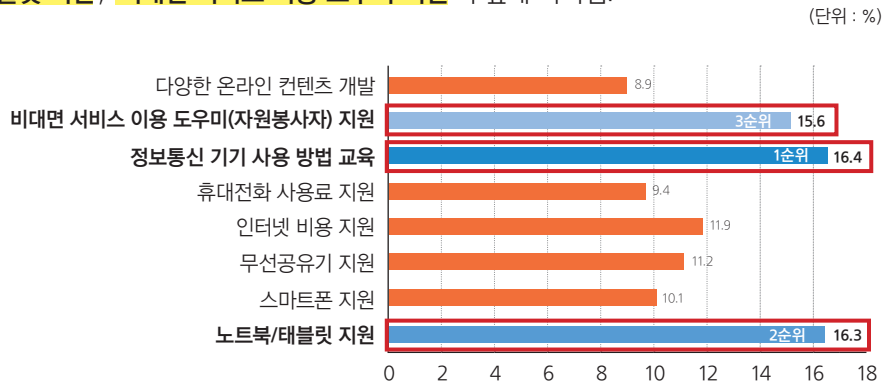
- 스마트폰이나 PC를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가 개발된다면, 앞으로 ‘비대면 서비스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62.2%)’는 응답이 높았으며, 특히 장애인의 참여의사(69.2%)가 노인(51.7%)보다 높게 나타남.

- 향후 비대면으로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 내용으로는 ‘미디어 활용 능력, 만들기 수업, 문화예술’ 순으로 취미 여가활동 관련 서비스 욕구가 높게 나타남.



[그림 5] 향후 이용하고 싶은 비대면 서비스

- 비대면 서비스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이유를 살펴보면 ‘사용방법을 모르거나 방법을 배우기 어려울 것 같아서’, ‘집에서 혼자 하는 것이 싫어서’, ‘이용할 기기가 없어서’ 등으로 나타남.
-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위해 이용자에게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는 ‘정보통신 기기 사용방법 교육’, ‘노트북/태블릿 지원’, ‘비대면 서비스 이용 도우미 지원’이 높게 나타남.



[그림 6] 비대면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지원

- 경상북도 및 지자체의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태블릿 등 정보통신 기기 지원’, ‘인터넷 구축’, ‘인터넷 비용 지원’, ‘다양한 콘텐츠 기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노인의 경우 ‘정보통신 기기 사용 방법 교육’, ‘무선공유기 지원’, ‘스마트폰 지원’, ‘비대면 서비스 이용 도우미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인의 경우에는 ‘노트북/태블릿 지원’, ‘비대면서비스 이용 도우미 지원’, ‘정보통신기기 사용 방법 교육’, ‘인터넷 비용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남.

2) 비대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

▣ 조사개요

- 조사대상 : 비대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종사자 37명(9개소),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51명(12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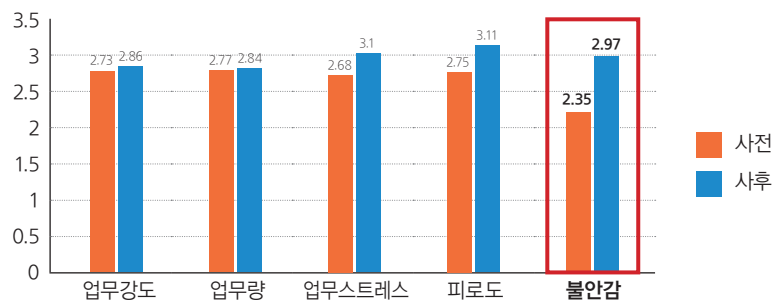
- **조사기간(방법)** : 2021년 10월 4일 ~ 10월 22일(자기기입식 조사)
- **조사내용** : 코로나19에 대한 인식 및 생활변화, 비대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및 경험, 비대면 사회복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 **조사결과**

-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에서 비대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38.31세 여성으로 대학교 졸업 학력이 많았고, 팀장 및 과장으로 현 시설 근무기간은 평균 4년 7개월인 것으로 나타남.

(1) **코로나19에 대한 인식 및 변화**

-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될 염려가 크다는 인식이 높았으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업무스트레스와 피로도’가 가장 높았고,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업무 관련 변화**에서는 ‘**불안감**’, ‘**업무스트레스**’, ‘**피로도**’ 순으로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남.



[그림 7]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이후의 업무강도, 업무스트레스

(2) **비대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현황**

-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관에서 제공한 비대면 서비스는 주로 ‘교육 및 훈련, 취미여가 활동’이며, 제공방법은 ‘유튜브, 실시간 온라인 화상, 네이버 밴드’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비대면 사회복지서비스 개발 필요성 응답은 99%로 매우 높게 나타남.**

(3) **비대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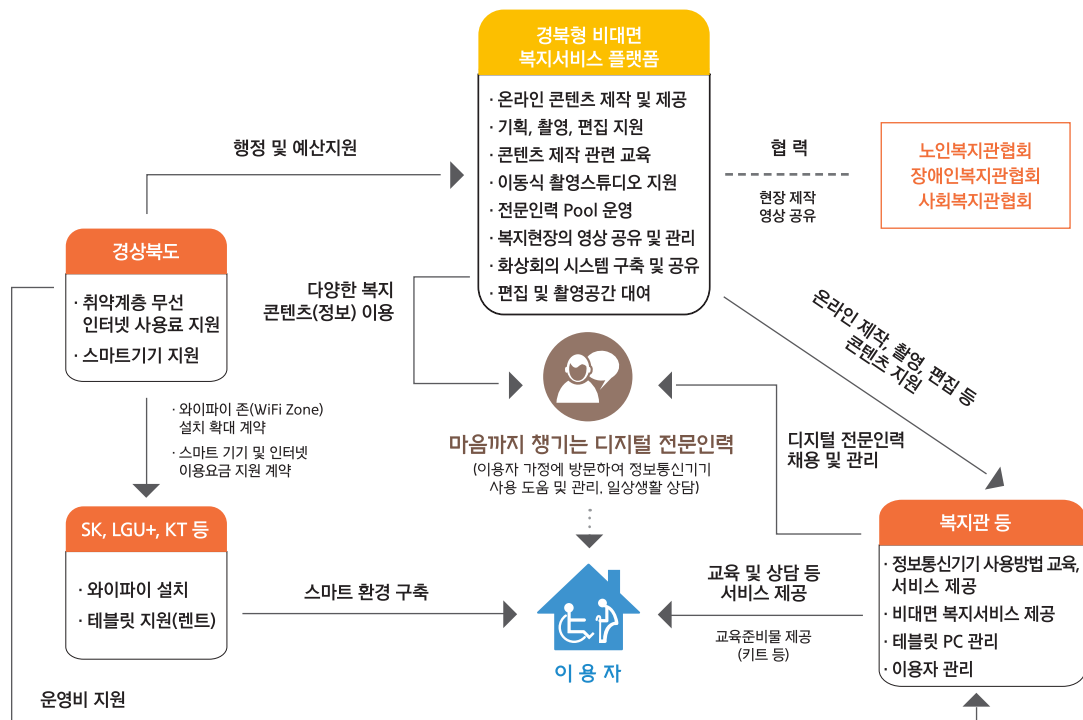
-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느낀 편리성(좋은점)으로는 [업무영역] ‘콘텐츠 중복 및 반복 사용 가능’, [이용자영역] ‘대면접촉이 없어 감염예방에 도움’, [콘텐츠 영역]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진행, 배포’ 등 직원의 역량 강화로 나타남.
-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느낀 불편성(힘든점)으로는 [업무영역] ‘콘텐츠 개발 등 업무량 증가’, [이용자 영역] ‘**이용자의 비대면 방식 활용 경험 부족으로 서비스를 거부할 때**’, [콘텐츠 영역]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콘텐츠 개발의 어려움’으로 나타남.

(4) 비대면 사회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이용자의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정보통신 기기 사용방법' 교육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온라인 콘텐츠 개발, 비대면 서비스 이용 도우미(자원봉사자) 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기관 및 종사자에게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는 '비대면 서비스 제공 위한 환경 구축',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위한 직원 역량 강화 지원', '비대면 서비스 제공 위한 운영체계 및 매뉴얼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경상북도 및 지자체에서 비대면 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기자재/인터넷 사용료/콘텐츠 제작비 등 비용 지원', '직원 역량강화 위한 맞춤형교육 지원', '전문인력 지원' 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3. 장애인 및 노인의 비대면 사회복지서비스 정책 제언

- 1 경북 취약계층 언택트 돌봄을 위한 IT(Information Technology) 기기 보급 및 적극적 활용이 필요함.
- 2 비대면서비스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경북 스마트 복지 환경구축”이 필요함. 구체적으로는 ‘이용자의 스마트 복지 환경 구축’, ‘이용자에 대한 디지털 기기 사용방법 교육 및 지원’, ‘비대면 복지서비스 플랫폼 구축’이 종합적으로 필요함.
- 3 중장년, 노년장애인 등 특성을 고려한 비대면 서비스 개발이 필요함.
- 4 지역 모임, 민간서비스 기관, 평생학습기관 등 지역의 일반 서비스 이용을 통한 장애인, 노인 등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유도가 필요함.



[그림 8] 경북 스마트 복지환경 구축(안)

*** 참고문헌**

방혜선, 이지은, 홍재은, 2020., 포스트코로나, 노인복지서비스 현안과 대응, 청주복지재단
 석희정, 2020, 코로나19 감염병 발생과 지역사회복지관의 비대면서비스 운영실태, 경기복지재단
 신상준, 김지민, 정은희, 2020,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연구, 인천광역시사회복지서비스원
 뉴시스, 2021.11.9. 전진우 기자, 경북, 11곳 48명 확진...지난 1주 하루 평균 55.0명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109_0001643864)

본 내용은 경북행복재단(2021)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 및 노인복지관 비대면 사회복지서비스 실태' 보고서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하였음.

SPECIAL COMMENT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으로 비대면서비스가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 노인복지 분야에도 비대면사회복지서비스의 요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많은 기관과 단체에서 비대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대상자들은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대면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소프트웨어의 사용방법을 알아야하고, 그전에 디바이스(PC,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사용이 선행 학습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비대면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인터넷 설치, 무선인터넷 장비 설치 및 WIFI 활성화 등)이 구성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 첫째,** 비대면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정보취약계층(장애인, 노인)을 대상으로 지자체 및 관련기관에서 최신화된 스마트 기기, 주변기기 보급사업 확대, 관련 교육 필요
- 운영체제 버전별로 디바이스(PC,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사용방법이 다르고, 비대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및 매체의 지원 가능여부가 판단되므로 최신운영체제가 지원되는 기기가 필요
 - 비대면 복지서비스에 주변기기(화상카메라, 마이크 등)가 요구된다면 그에 맞는 지원 필요
 - 비대면 복지서비스에 필요한 디바이스(PC,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 관련 교육 필요
- 둘째,** 정보취약계층(장애인, 노인)의 비대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을 위한 환경구축 지원 필요
- 경제적 여건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인터넷, 무선공유기 설치, WIFI 사용방법 교육 등 지자체 및 관련기관의 지원 필요

최규중 경상북도장애인정보화협회장

02

경상북도 중년층 노후준비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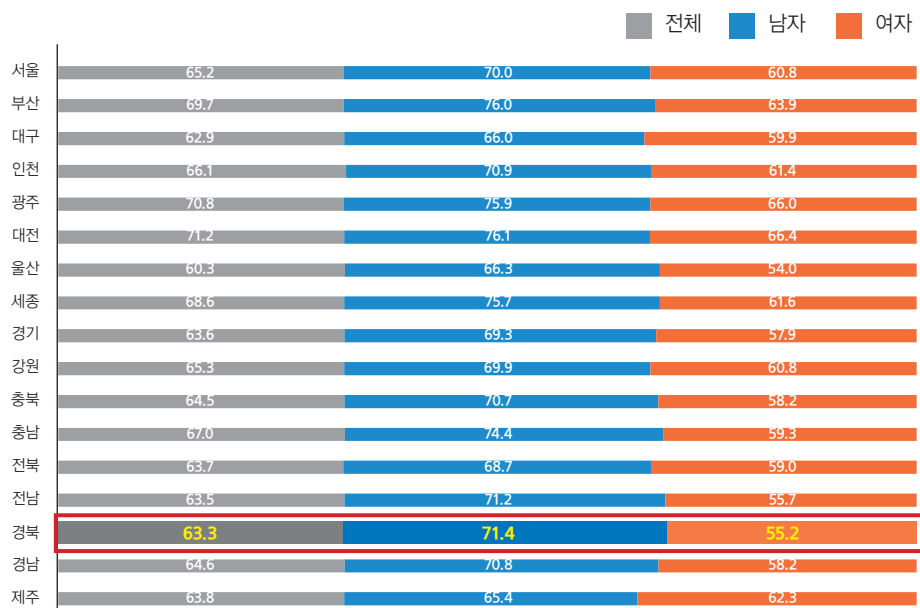
김성훈 (경북행복재단 선임연구원)

조성숙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심정미 (영남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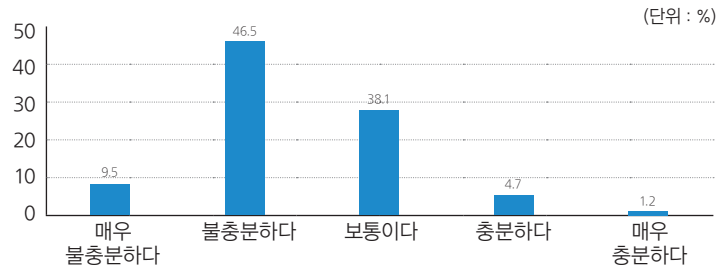
- 우리나라 2020년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43.8%로 OECD 회원국 중에서 1위이며, OECD 평균인 14.2%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임. **경상북도는 2019년 65세 이상 비율이 20%(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20.6%)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음.**
- 이러한 상황은 행복한 노후보다는 나이가 들어서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고민을 해야 하는 처지의 노인들이 많다는 불행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임. 2019년 사회조사에서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노후 준비 여부를 살펴 본 결과, 대전광역시 71.2%로 가장 높았으며, 울산광역시가 60.3%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 **경상북도는 63.3%로 17개 지자체 중 15위로 낮은 수치를 보여,** 경상북도민의 노후준비실태가 타 시도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에 본 연구는 경상북도 중년층(40~55세)의 노후준비 실태를 분석하여 경상북도 중년층의 노후준비 상황 분석을 통하여 노후준비에 대한 교육 및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과 노후대책에 대한 국가의 지원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그림 1] 지역별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인구비율(19세 이상)

2. 실태조사 분석¹⁾

- 2021년 경상북도 중년층(40~55세)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지금 현재 적절한 노후생활에 대비하여 충분한 노후자금이 마련되어 있는가에 대한 물음의 결과에서도 '불충분하다(매우 불충분하다+ 불충분하다)' 56.0%**로 경북도민의 노후생활대비 노후자금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2] 노후 생활대비 노후자금 충분 여부

- 노후준비 인식을 살펴본 결과 **신체적 건강관리 '필요하다'(대체로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 58.1%(468명)**, 평균 3.85점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자립은 '필요하다' 72.8% (587명)**, 평균 4.10점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관계는 '필요하다' 63.8%(514명)**, 평균 3.83점, **정서·여가관리는 '필요하다' 53.3%(430명)**, 평균 3.74점이었음.

[표 1] 노후준비 필요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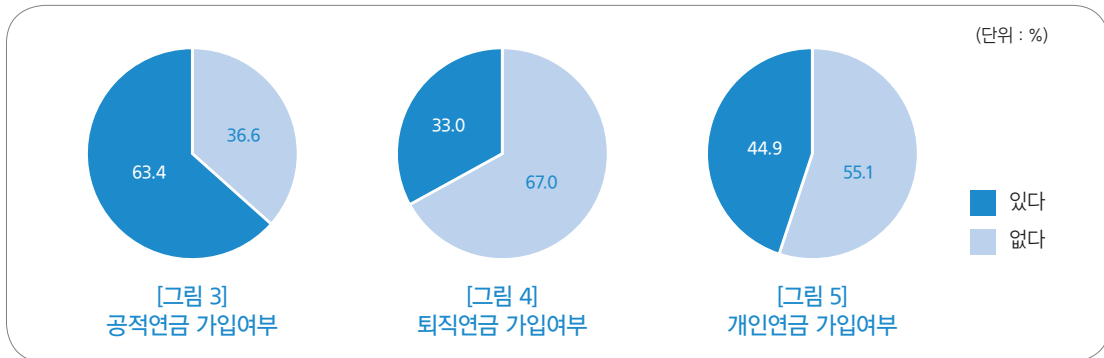
(단위 : 명(%), 점)

내용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계(%)	평균(M)
신체적건강 관리	8 (1.0)	41 (5.0)	289 (35.9)	195 (24.2)	273 (33.9)	806 (100.0)	3.85
경제적 자립	1 (0.1)	9 (1.1)	209 (26.0)	274 (34.0)	313 (38.8)	806 (100.0)	4.10
사회적 관계	5 (0.6)	61 (7.6)	226 (28.0)	285 (35.4)	229 (28.4)	806 (100.0)	3.83
정서·여가관리	1 (0.1)	27 (3.3)	348 (43.3)	233 (28.9)	197 (24.4)	806 (100.0)	3.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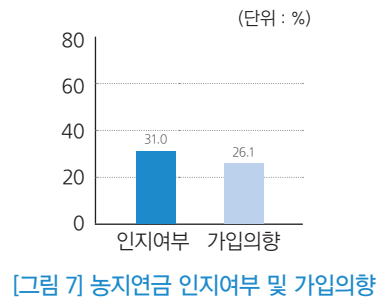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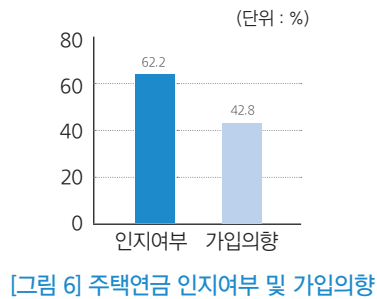
- 노후준비와 관련하여 재무준비에 있어서 **공적연금 가입여부**는 63.4%가 가입하고 있으며, **가입한 공적연금 종류**는 국민연금이 54.0%, 사학연금 6.8%, 공무원연금 2.4%, 별정직 우체국 연금 0.2%순으로 나타났고, 월 평균 가입금액은 20.06만원으로 나타났음.

- 퇴직연금 가입 여부**는 33.0%가 가입하고 있으며, 월 평균 가입금액은 19.64만원이며, **개인연금 가입여부**는 44.9%가 가입하고 있으며, 가입금액은 월 평균 30.75만원임.

1) 설문조사는 2021년 10월 1일부터 10월 22일까지 진행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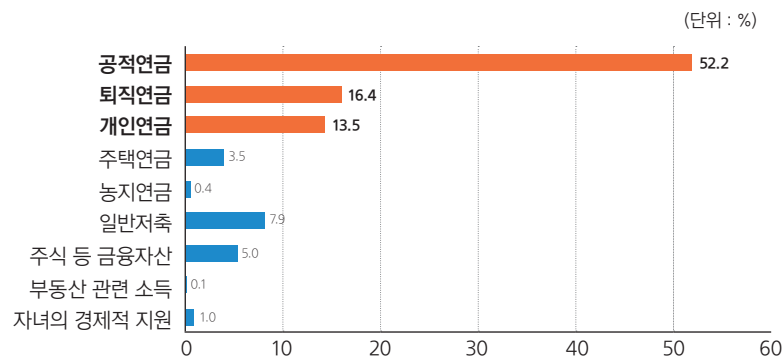


▣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인지여부와 가입의향 분석 결과, 주택연금은 응답자의 62.2%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향후 가입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42.8%로 나타나 가입의향이 높지 않았음. 또한 농지연금에 대해서는 31.0%만 알고 있으며, 향후 가입의향을 묻는 질문에도 26.1%만 가입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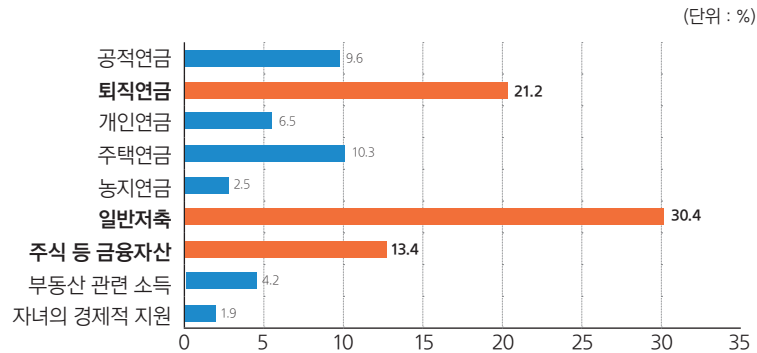


▣ 은퇴 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노후생활자금 두 가지를 묻는 질문의 1순위는 국민연금 및 공적연금 52.2%, 퇴직연금 16.4%, 개인연금 13.5%, 일반저축 7.9%순이었음. 2순위는 일반저축 30.4%, 퇴직연금 21.2%, 주식·펀드·기타 금융자산 13.4% 순으로 나타남.

▣ 즉, 1순위로는 국민연금 및 공적연금, 2순위로는 일반저축을 은퇴 후 가장 중요한 노후자금으로 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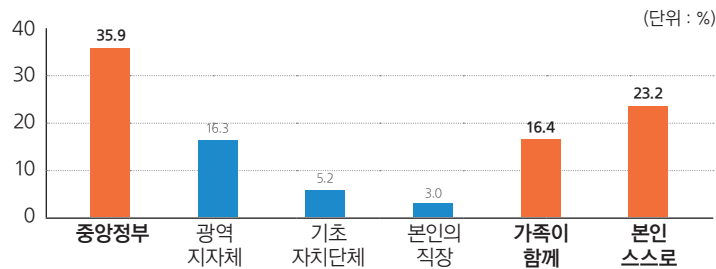


[그림 8] 은퇴 후 가장 중요한 노후생활자금(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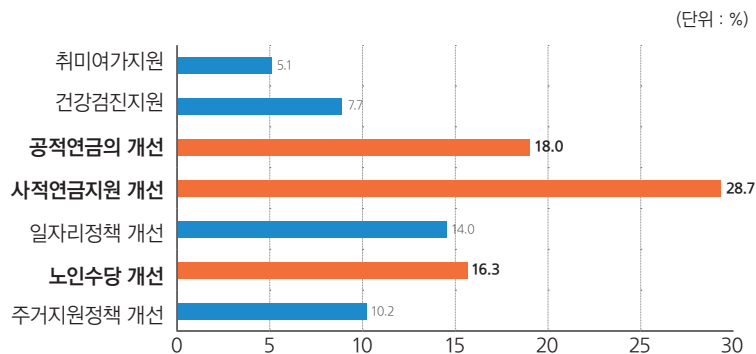
[그림 9] 은퇴 후 가장 중요한 노후생활자금(2순위)

□ 노후 준비의 주체에 대한 질문에는 중앙정부 35.9%, 본인 스스로 23.2%, 가족이 함께 16.4%, 광역지자체 (경상북도) 16.3%, 기초자치단체(시·군) 5.2% 순으로 응답하여 노후생활보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10] 노후준비 주체

□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지원개선 28.7%, 공적연금의 개선 18.0%, 노인수당(기초연금 등)의 개선 16.3%, 일자리지원 정책의 개선 14.0%, 주거지원 정책의 개선 10.2% 순이었음.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해서는 경제력 확보를 위한 연금이나 수당개선, 일자리 지원 정책 개선 등이 중요함을 알 수 있음.



[그림 11]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필요한 개선 사항

3. 경상북도 중년층 노후준비 방안

- ▣ 정부는 개인 차원의 노후준비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국민 스스로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점검-계획-실천의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5년 「노후준비 지원법」을 제정하고 2016년 도입함. 노후준비서비스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한국형 복지제도이며 다음과 같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었음.



- ▣ 세계에서 노후준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다수지만, 한국형 노후준비서비스와 성격이 상이함. 가령 한국과 같이 연금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곳은 독일이 있지만 독일은 유급이며, 시간과 상담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다름. 반면 우리나라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독일과 달리 경제적 상담과 함께, 건강, 여가, 대인관계 까지 상담 및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음.

- ▣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아직까지 많은 도민들이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 따라서 도민들이 많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함.

※ 최근 1년간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노후준비서비스(교육, 상담 등)를 이용한 경험에 대한 물음에 11.7%만 참여. 서비스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함.



① 노후준비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체계 구축

- ◆ 현재 국민연금공단 지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노후준비서비스는 물리적으로 접근의 어려움이 있음. 이에 **접근성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노후준비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원화가 필요함.**
- ◆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상북도 차원의 조례를 제정하여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근거의 마련**이 필요함.

② 교육체계 강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 ◆ 비대면 서비스 및 교육 체계 강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을 통해 누구나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관련 교육의 동영상 플랫폼을 구축하여 **불편함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나아가 노후준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1대1인 비대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③ 재무상담 다양화 필요

- ◆ 실태조사 결과 은퇴 후 가장 중요한 노후생활 자금으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금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0%를 넘기는 것으로 나타나 공적 연금에 대한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 응답자 중 개인연금은 44.9%, 퇴직연금은 33.0%만 가입하고 있음. 반면, 주식 및 펀드 등의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45.4%로 높게 나타남.
- ◆ 이에 공적연금 외 다양한 **사적연금과 금융자산 마련을 위한 재무 상담과 개인 맞춤형 노후자금 재무 계획수립지원**이 필요함.

④ 저소득 가구를 위한 노후자금 지원

- ◆ 소득이 낮은 가구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 희망키움 통장, 경기도의 청년통장처럼 **노후자금 마련 지원을 위하여 경북형 노후준비 통장의 개설을 제안함.**
- ◆ 노후준비 통장은 경상북도 도민 60세(부부 일 경우 한명 만)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매달 2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3년 후 1,080만원이 적립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 참고문헌**

이소정·성혜영·유재언·김재호·이금룡. (2014). 노후설계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및 콘텐츠 개발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통계청. (2019). 2019년 사회조사보고서 : 복지·사회참여·문화와 여가·소득과 소비·노동

본 내용은 경북행복재단(2021) '경상북도 중년층 노후준비 실태분석 및 노후빈곤 예방 방안' 보고서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하였음.



최근 들어 국민연금 고갈이 된다는 이야기가 언론 등에 많이 노출되면서 노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 및 지자체에서는 국민 스스로가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후준비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도민은 서비스에 대한 체감도가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각 지자체에서도 노후준비지원센터와 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실시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상북도도 이에 발맞추어 빠른 시일 내에 노후준비지원센터와 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경상북도 장년층 노후준비 실태 분석 및 노후빈곤 예방 방안 연구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노후준비와 관련한 정책 및 서비스가 발전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문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현행 국민연금공단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노후준비 서비스를 광역(시·도), 지자체(시·군)에서도 서비스를 통한 서비스의 다양화 및 접근성 강화가 이루어 질 때 도민의 노후준비에 대한 체감도 향상과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노후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건강·여가·대인관계 또한 노후 생활에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이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경상북도민의 장년층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 되어 있는 「경상북도 장년층 인생이모작지원 조례」와 연계하여 경상북도 노후준비지원센터와 노후준비협의체의 구축을 위한 근거의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철 경상북도 어르신복지과장

03 경상북도 조손가정 지원방안

김유리 (경북행복재단 연구원)
이상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코로나19 이후 유일한 생계부양자가 노인인 조손가정은 더욱 더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 이러한 조손가정이 지니고 있는 어려움은 복합적임. 조부모들은 신체적 쇠약, 양육스트레스, 학습지도의 어려움이 있으며, 손자녀들은 심리정서적인 문제와 함께 또래 아동에 비해 학습 부진이 높으며, 장시간 미디어에 노출되는 문제도 발생되고 있음.
- ▣ 하지만 조손가정을 위한 지원체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가령, 2021년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에서는 서비스를 총 5개 영역(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으로 구분하였는데 이 중 조손가정을 위한 서비스 영역은 양육·돌봄에 한정되어 있음.
- ▣ 이에 본 연구는 경상북도 조손가정의 조부모와 현장 실무자의 심층면접을 통해 조손가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조손가정 현황 및 관련 정책

1) 조손가정 현황

- ▣ 2020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국의 조손가정 수는 114,417 가구임.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은 경기도 23.3%(26,682 가구)이며, 다음으로 서울 17.7%(20,209 가구)임. **경북**은 경남 6.2%(7,107 가구) 다음의 **6.1%(7,012 가구)로 전국에서 조손가정 수가 4번째로 높게 나타남.**

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조손가정은 “부모의 사망 등으로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로 설명함. 이때 세부적인 아동의 사례는 다음과 같음.

-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부모가 가정의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표 1] 연도별 조손가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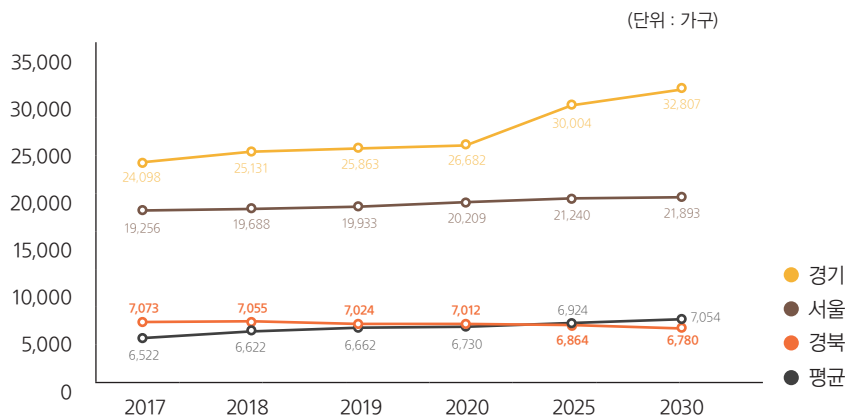
(단위 : 가구, %)

지역	2017	2018	2019	2020	비율(%)	2025	2030
전국계	110,882	112,574	113,261	114,417	100.0	117,705	119,924
서울	19,256	19,688	19,933	20,209	17.7	21,240	21,893
부산	7,588	7,609	7,572	7,553	6.6	7,274	6,934
대구	5,014	5,017	4,959	4,906	4.3	4,565	4,175
인천	5,198	5,276	5,330	5,392	4.7	5,595	5,719
광주	3,342	3,334	3,318	3,304	2.9	3,122	2,873
대전	2,928	2,948	2,943	2,947	2.6	2,847	2,670
울산	1,681	1,715	1,716	1,733	1.5	1,790	1,868
세종	484	526	559	586	0.5	724	953
경기	24,098	25,131	25,863	26,682	23.3	30,004	32,807
강원	4,561	4,575	4,551	4,550	4.0	4,491	4,443
충북	3,940	3,942	3,949	3,958	3.5	3,932	3,828
충남	5,374	5,438	5,462	5,529	4.8	5,708	5,917
전북	5,586	5,567	5,504	5,501	4.8	5,290	5,028
전남	6,286	6,219	6,102	6,053	5.3	5,744	5,443
경북	7,073	7,055	7,024	7,012	6.1	6,864	6,780
경남	7,100	7,140	7,088	7,107	6.2	7,104	7,171
제주	1,373	1,394	1,388	1,395	1.2	1,411	1,422
평균	6,522	6,622	6,662	6,730	-	6,924	7,054

* 조부모+미혼손자녀, 조부 또는 조모 미혼손자녀 가구

자료 : 통계청(2021). 장래가구추계 자료 재구성.

전국의 경우 평균 조손가구 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경상북도는 2030년에는 전국 평균 대비 조손가정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경상북도 조손가구 현황은 전국 평균보다 상위에 위치해 있고, 17개 시도 중 3~4번째의 높은 수준에 있음.



[그림 1] 연도별 조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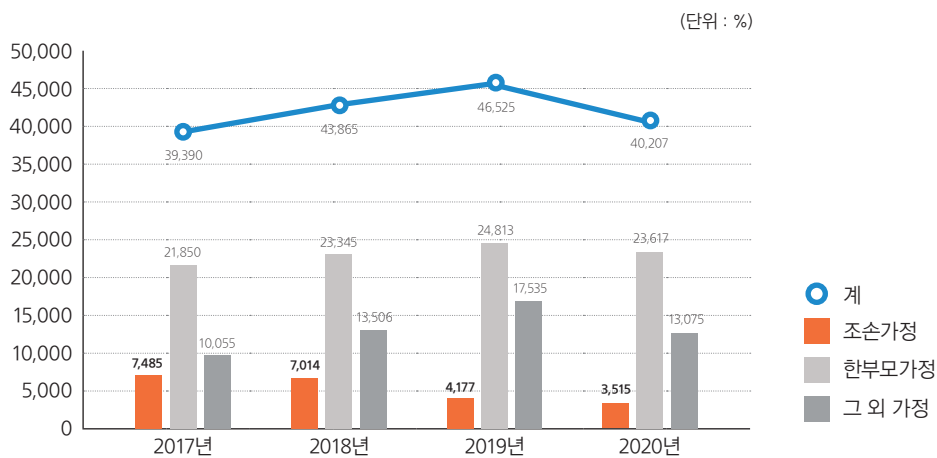
2) 조손가정 관련 정책

-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손가정에 제공하는 관련 정책 및 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부처별로 상이함. 따라서 정부가 '조손가족'을 복지서비스 내용으로 명확히 나타내는 '2021년 한부모·조손가족 복지 서비스 안내'를 중심으로 보면, **조손가족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 및 서비스 영역은 '양육·돌봄'에 집중되어** 있음. '임신·출산' 영역의 경우 특별히 해당하는 내용이 없을 수 있으나 '교육·취업' 등의 영역에서 조손가족이 공식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은 부재한 상황임.

[표 2] 2021년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중 조손가정 이용 가능한 서비스 내용

영역 구분	서비스 내용
임신·출산	· 없음
양육·돌봄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 · 가족역량강화 지원 ·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 · 지역아동센터 지원
시설·주거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교육·취업	· 없음
금융·법률	·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 미소금융(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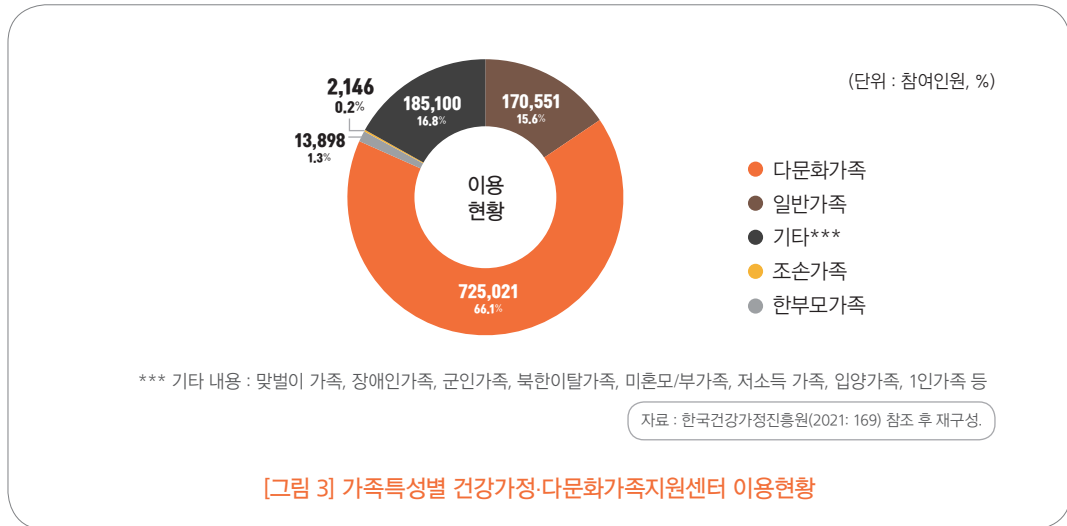
- 2020년 기준 건강가정지원센터 학습정서지원을 위한 서비스가 **조손가정을 대상으로 총 3,515건** 제공되었음. 조손가정의 경우 매년 조금씩 서비스 비율이 감소하여 **2017년 19.0%에서 2020년 8.7%로 절반 가량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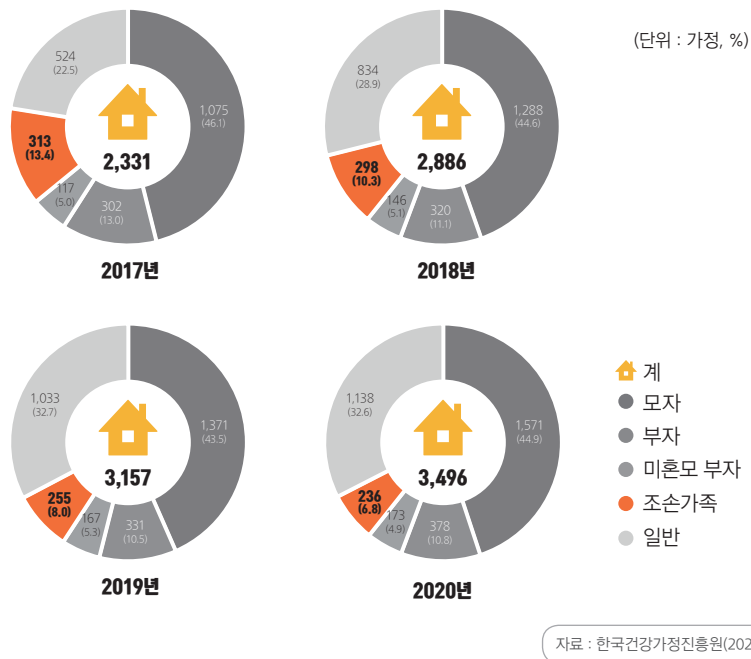
자료 :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21: 72) 참조 후 재구성.

[그림 2] 건강가정지원센터 학습정서지원 서비스

▣ 가족특성별 전체 참여인원 총 1,096,716명 중 **조손가족 참여인원은 2,146명으로 전체의 약 0.2% 수준에 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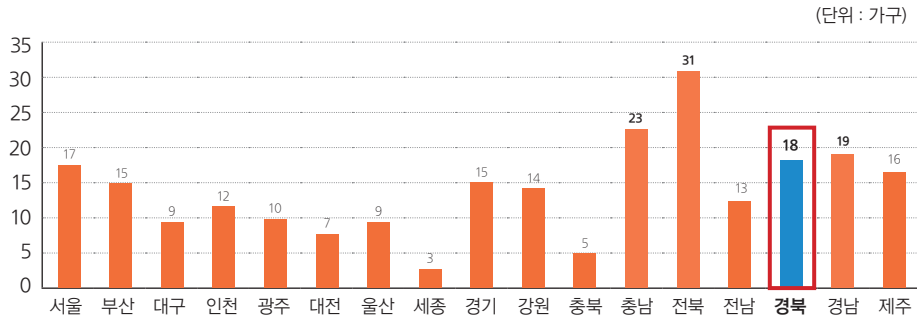


▣ 연도별 건강가정지원센터 취약·위기가족지원서비스²⁾의 사례관리 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사례관리 대상 조손가정은 총 236가정으로 2017년 313가정, 2018년 298가정, 2019년 255가정에서 지속 감소하였음.



2)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족을 대상으로 지속적 사례관리, 자녀 학습·정서지원, 생활가사지원 등 제공

□ 전체 236개 사례 중 경북의 조손가정은 총 18가구로, 전체의 7.6% 수준임. 17개 시·도 중 전북이 총 31개로 가장 많고, 충남 23개, 경남 19개, 경북 18개 순으로 나타남.



[그림 5] 경상북도 취약·위기가족지원서비스 사례관리 대상자 현황

3. FGI 분석 결과

□ FGI는 조부모(만 65세 이상) 3명, 현장 실무자 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조손가정 대상 면접은 2021년 9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실무자 대상 면접은 2021년 6월 2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실시하였음.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와 같음.

[표 3] 조손가정(조부모) 참여자 특성

	연령(만)	성별	세대구성	손자녀	손자녀 연령	손자녀 성별	지역
참여자A	70대	여	조모+손자녀	2명	11세(쌍둥이)	남	영천시
참여자B	60대	여	조모+손자녀	2명	12세(쌍둥이)	남	영천시
참여자C	60대	여	조부모+손자녀	1명	10세	남	구미시

[표 4] 현장 실무자 참여자 특성

	연령대	성별	지역	소속기관
참여자A	50대	남	성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참여자B	30대	여	성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참여자C	40대	여	성주	종합사회복지관
참여자D	40대	남	대구	종합사회복지관
참여자E	40대	여	구미	종합사회복지관
참여자F	40대	여	영천	학교사회복지사
참여자G	30대	여	대구	학교사회복지사
참여자H	30대	여	대구	학교사회복지사
참여자I	30대	여	대구	지자체 사례관리사
참여자J	50대	여	구미	지역아동센터
참여자K	30대	여	김천	드림스타트
참여자L	40대	남	대구	청소년쉼터
참여자M	30대	여	구미	행정복지센터

▣ 조부모를 대상으로 조손가정의 어려움과 정책적 이용 시 어려운 점을 심층면접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5] 조부모 대상 FGI 분석 결과

상위영역		하위영역
조손가정의 어려움	조부모	① 조손가정에 이르기까지 겪은 상처, 주변시선 등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 ② 양육에 대한 책임감, 부담감 등의 스트레스 ③ 고령으로 인한 신체적 어려움 ④ 코로나19 이후 교육 및 학습지도 어려움 ⑤ 사망 후 남겨진 손자녀에 대한 걱정
	손자녀	① 불안정한 애착관계로 인한 심리정서적 어려움 ② 학습부진
	가정	① 경제적인 문제
정책 이용의 어려움		① 어려움을 모두 개인의 문제로 인식 ② 정보에 대한 무지로 서비스육구 상실

▣ 현장실무자를 대상으로 조손가정이 정책 및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어려움과 조손가정 지원방안에 대해 심층면접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6] 현장실무자 대상 FGI 분석 결과

상위영역		하위영역
정책 및 서비스 이용 시 어려움		① 대상자 발굴의 어려움 ② 낮은 정보접근성으로 서비스 이용 어려움 ③ 복잡하고 까다로운 정책 설계 ④ 일회성에 그치는 경제적 지원 서비스에 집중
조손가정 지원방안	정책적	① 조손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법 마련 ② 조손가정 전담기구 설치 ③ 학교-민간시설-지자체 연계 보완 ④ 경제적 지원 시스템 보완
	실천적	① 조부모 양육 코칭 및 자조집단 ② 멘토링사업 확대 실시 ③ 조부모-손자녀 심리정서지원

4. 경상북도 조손가정 지원방안

① 조손가정 지원을 위한 조례 마련

- ◆ 경상북도 조손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마련된다면 이에 근거하여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현황이 파악되어 체계적인 지원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임.**

② 전담인력 배치

- ◆ 정보취약계층으로 이루어진 조손가정에 필요한 서비스 안내, 신청 지원, 연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이 배치될 필요가 있음.**

③ 경제적 지원 시스템 보완

- ◆ 조손가정의 조부모는 경제적 수입이 매우 낮거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환산되어 생활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시골 땅이나 집 등이 자산으로 측정되어 경제적 지원 자격에서 박탈됨. 이에 조손가정에 있어서는 보다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 시스템이 필요할 것임.
- ◆ 예외적으로 서류상 일반가정일지라도 **실제적인 조손가정임이 증빙 된다면 혹은 조부모의 재산이 현금화하기 어려운 경우가 확인이 된다면 예외적으로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임.**

④ 멘토링사업 개선 및 확대

- ◆ 조손가정을 비롯한 취약가정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멘토링사업이 개선 및 확대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지자체 및 교육청에서는 대학생 멘토링서비스, 청소년동반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한시적으로만 진행되어 서비스 효과에 한계가 있음. 이러한 **사업들의 지속성,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참고문헌

박화옥·김민정·임정원·연윤영, 2020. 조손가족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세이브더칠드런·강남대학교.
 여성가족부·복권위원회, 2021. 2021년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
 통계청, 2021. 인구총조사.
 통계청, 2021. 장래가구추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1. 2020 가족지원사업 연간결과보고서.



경상북도 내 조손가정의 수는 약 7천 가구로 전국에서 4번째(6.1%)로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손가정 관련정책 또한 양육과 돌봄에 국한되어 있어서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 서비스 분야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부모나 아동들의 경우 서비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낮아 서비스 접근과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기존 서비스에 참여하는 비율도 현저히 낮습니다. 이런 조손가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조손가정의 조부모와 현장실무자들을 심층면접하고,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 사회복지현장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움을 느끼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 첫째,** 정책적으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실천분야가 따라올 수 있으므로 조례 마련이 가장 시급해 보입니다. 조손가정을 위한 조례가 마련된다면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 둘째,** 정책이나 서비스가 마련된다고 할지라도 고령의 조부모와 미성년자인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은 서비스나 정책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전담인력의 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셋째,**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현장에서 많은 공감받은 부분은 실천분야에서 제안하신 조모와 아동 간 심리정서프로그램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입니다. 사춘기에 접어드는 아동들의 경우 내면의 어려움을 아동 개인이 아니라 양육자와 같이 접근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경상북도 내 조손가정의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가 정책으로 이어지고 조손가정의 필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김영희 경북지역아동센터협의회장

경북행복재단 미션 및 비전



MISSION 경상북도 사회서비스의 공적 책임과 가치 실현

VISION 지역 사회서비스 미래를 열어가는 전문기관

경영목표 & 추진전략

사회서비스 정책연구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사회서비스 인력역량강화	사회적 가치 실현
<p>01</p> <p>지역 수요 맞춤형 정책 개발 및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 정책변화에 대응하는 연구 수행 및 기초통계 구축 · 사회서비스 협력체계 기반조성 및 학술대회 개최 · 도·시군 및 현장 요구의 맞춤형 대응 	<p>02</p> <p>사회서비스 기관 현장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현장 개선과제 발굴 · 컨설팅·평가·인증 · 시설운영·평가 표준 매뉴얼 개발 및 보급 	<p>03</p> <p>보건복지 관련 교육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교육콘텐츠 개발·운영 · 사회서비스 현장 교육 수요 조사 · 교육 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p>04</p> <p>사회적 가치 실현 시스템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리·인권,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및 확산 · 노동환경, 안전 등 사람중심 안전사회 구축 · 도민참여, 상생협력 등 참여중심 협력 사회 구축



2년 연속(2020, 2021)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최우수 S등급' 달성

「경북행복 BRIEF」는 경북행복재단의 보건·복지 연구성과 및 주요 동향을 경상북도민에게 발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분기별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 부탁드립니다.